

보고서

6·3 지방선거 AI 정책 공약 답변 공개 및 평가

AI 활용, 위험성 인지 불구 구체적 정책 제시
한계
속도전 아닌 주민 의견 수렴 병행돼야
AI 정책 공공성·시민참여·기본권·책임성
견지해야

일시 | 2026. 5. 31.

발행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AI시민행동)

목차

취지 및 조사 방법	3
후보자 답변 현황	5
총평	7
AI데이터센터 설립 관련 답변 및 평가	9
피지컬AI와 지역 경제 관련 답변 및 평가	12
스마트형 CCTV 운용 관련 답변 및 평가	14
교육 분야 AI 도입 관련 답변 및 평가	17
붙임자료. 후보자 답변 현황	23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은 2026년 3월 31일 발족해, 녹색연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소비자, 평화 분야 전국 46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AI시민행동은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민주적 공론장 형성을 목표로 활동하며,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명목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그 영향받는 사람과 지역의 권리를 소홀히 취급하는 등 한쪽으로 치우친 정부 정책을 균형있는 사회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문의 : AI시민행동 사무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취지 및 조사 방법

취지

- 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고 사회 전분야에 걸쳐 인공지능 전환(AI)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입은 일부 생산성 효율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자리 대체와 노동강도 강화,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침해, 환경과 자원의 수탈, 학습데이터의 편향과 차별 등 개인은 물론 공동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정부 정책은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보다는 기술강화와 성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AI가 더 이상 과학기술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AI 정책은 사람과 공동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수립 전반에 성평등을 실현하고 환경과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 이러한 책무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따라서 지역의 주요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은 지역의 AI 현안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위험에 대한 대책, 투명한 행정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 등을 위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에 AI시민행동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 현안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인식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 비전 등을 파악하고 무분별한 인공지능 낙관론이 아닌 안전하고 통제가능한 인공지능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AI 교육 정책, ▲AI데이터센터 설치, ▲피지컬AI와 지역 경제, ▲스마트형 CCTV 운용 등 인공지능 관련 4가지 분야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 AI 관련 공약과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사 방법

- AI시민행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등록된 관련 광역 시도지사 후보 54명과 포항시, 구미시장 후보 3명(총 7명 중 연락처 미기재 제외) 및 교육감 후보 58명 등 총 **115명**의 후보 선거사무소 전화번호를 통해 먼저 후보자들이 수신할 수 있는 연락처를 확인하고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공개 질의서를 발송, 답변을 받아 그 답변서를 바탕으로 <6·3 지방선거 AI 정책 공약 답변 공개 및 평가>를 작성하였습니다. AI시민행동은 광역 시도지사 54명에게는 ▲AI 교육 정책, ▲AI데이터센터 설치, ▲피지컬AI와 지역 경제, ▲스마트형 CCTV 운용 등 인공지능 관련 4가지 분야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교육감 후보 58명에게는 교육 분야 AI 도입 관련 분야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 특이사항으로 AI데이터센터 예정지 중 1GW 이상의 초대형 AI데이터센터 사업 계획을 밝힌 곳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포항시 등 4곳으로,

경상북도 구미시, 포항시 후보들(총 7명 중 연락처가 없는 후보를 제외한 3명)에게도 질의했습니다.

- 공개 질의서를 수령한 후보자들 중 시·도지사 후보 **11명**, 시·도 교육감 후보 **15명**이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2명**이 선거 운동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 한편 이번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소 전화번호가 잘못되었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신 확인 및 답변 요청이 쉽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선거사무소 연락처의 관리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이 본격 시작되어 한창 바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후보자들과 전화 연락이 닿지 않거나, 답변을 아예 안하거나, 답변할 여유가 없다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스스로 공약을 설명할 기회를 저버린 것일 뿐 아니라 유권자들이 주권자로서 후보자에 대해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선거 운동 관행은 후보자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선거 과정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알고 싶은 정보를 후보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6·3 지방선거 AI 정책 공약 공개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후보자 답변 현황

표1. 공개 질의에 답변한 광역단체장 후보 현황(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순)

지역	후보자 이름	소속	답변
서울특별시	권영국	정의당	답변보기(링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은미	정의당	답변보기(링크)
울산광역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답변보기(링크)
울산광역시	김중훈(단일화 후 사퇴)	진보당	답변보기(링크)
세종특별자치시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답변보기(링크)
경기도	홍성규	진보당	답변보기(링크)
충청북도	김영환	국민의힘	답변보기(링크)
충청남도	김태홍	국민의힘	답변보기(링크)
전라북도	백승재	진보당	답변보기(링크)
전라북도	양정무	국민의힘	답변보기(링크)
경상북도	이철우	국민의힘	답변보기(링크)
부산광역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답변 불가 응답
인천광역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답변 불가 응답
답변	11명		

표2. 공개질의에 답변한 시·도 교육감 후보 현황(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순)

지역	후보자 이름	답변
서울특별시	정근식	답변보기(링크)
	한만중	답변보기(링크)
	홍제남	답변보기(링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관호	답변보기(링크)
대구광역시	임성우	답변보기(링크)
인천광역시	임병구	답변보기(링크)
대전광역시	성광진	답변보기(링크)
울산광역시	조용식	답변보기(링크)
세종특별자치시	강미애	답변보기(링크)
경기도	임태희	답변보기(링크)
충청북도	김성근	답변보기(링크)
충청남도	이병도	답변보기(링크)
경상북도	임종식	답변보기(링크)
경상남도	오인태	답변보기(링크)
경상남도	권순기	답변보기(링크)
답변	15명	

- **AI**데이터센터 유치에 성장 전략? 전력·환경 부담과 지역사회 비용은 설명하지 못해
 - 피지컬**AI** 도입으로 노동권, 감시위험, 지역 경제 악영향 등 우려 불식시키지 못해
 - 스마트형 **CCTV**, 법률에 따른 통제 원칙 대체로 공감하나, 첨단 감시기술의 인권 영향에 대한 민감도 현격히 차이나
 - 기술 만능주의 경계, '인간 중심 교육', '교사 전문성 보장' 등 시민사회의 교육 분야 **AI** 핵심 정책 기조에는 동의
- **AI**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고 편익을 주기도 하지만 부정적 영향도 큼니다. 특히 한창 발달시기 아이들의 교육현장에 들어온 **AI**, 막대한 전기, 물 등의 환경적 비용을 지역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큰 **AI**데이터센터 설립, 노동자들의 일자리 뿐 아니라 지역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피지컬**AI**, 주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스마트기반 **CCTV** 등은 더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방 정부의 정책을 책임질 일꾼이라면 지금 당장 삶에 영향을 끼치는 현안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 **AI**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으로 입안하는 과정에, **AI** 정책이 기업 투자·산업 육성 중심인지, 시민의 권리와 공공 이익을 우선하는지(공공성), 주민·노동자·교사 등 이해관계자의 정책 결정에 참여를 보장하는지(민주성 및 시민참여), 인권·노동권·정보인권·환경권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있는지(기본권 보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단·시정·감독할 장치가 있는지(책무성과 통제 가능성) 등의 기본적인 원칙이 마련되어야 하고 준수되어야 합니다. **AI**시민행동은 이러한 원칙에 의거해 후보들의 답변을 분석, 평가했습니다.
 - **AI**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내온 후보들은 **AI**데이터센터 유치를 성장 전략으로 이야기하지만, 전력·환경 부담과 지역사회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AI**데이터센터 설치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물론 설치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편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 집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후보들은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지컬**AI** 도입에 대해 답한 후보들 중 피지컬**AI** 도입이 노동권, 감시위험, 지역 경제 악영향이란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사회적 논의기구와 노동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후보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은 후보로 나뉘었습니다. 피지컬**AI**가 노동현장에 도입되면 노동자의 고용 전환,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감시 위험과 정보인권 침해 문제, 피지컬**AI**로 인한 안전 문제 등 수많은 문제와 우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후보자들은 이에 대한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스마트형 **CCTV** 운용에 대한 답변에서도 법에 따른 통제라는 원칙에는 대체로 공감하였으나, 첨단 감시기술의 인권 영향에 대해 문제인식의 정도에는 후보자간 차이가 컸습니다. 스마트형 **CCTV**은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등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주민이 고지하고, 피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단·시정·감독할 장치와 대응체계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들은 이같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 교육 **AI** 분야에 대한 질의에 대해 대다수 교육감 후보들은 기술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인간 중심 교육'과 '교사 전문성 보장'이라는 시민사회의 핵심 정책 기조에 동의하였습니다. 대체로 진보쪽 후보들은 **AI**를 학교현장에 도입하더라도 교사의 업무 보조 정도에 머물러야 하고 학생의 정보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리터러시 교육 실시, **AI** 기반 평가 반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AI**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는 반면, 교육청 자체 **AI**에듀테크 플랫폼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통제 체계 마련에도 소극적인 후보가 있었습니다. 교육 **AI**는 학생들과 교사의 인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AI**가 편향성, 편견, 잘못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는 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바, 교육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교육은 더욱 신중하고 엄격히 감독되어야 한다는 점을 후보들은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이번 공개질의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살펴보면, 대체로 **AI**가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부 후보자는 **AI**를 실제로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며, '인간을 위한 **AI**'를 만들기 위한 충분한 숙고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AI**의 공공성, 책임성,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에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기본법령과 정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도 요구해 왔습니다. 지역 현장과 주민의 삶에 보다 밀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에만 매몰되지 않고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에 두는 사회정책으로서 인공지능 관련 행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 **AI**시민행동은 이들 후보자들의 답변서를 공개하여 지역의 일꾼을 직접 뽑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참고하도록 하고 이후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서도 **AI**의 공공성과 투명성 및 민주적 거버넌스라는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AI데이터센터 설립 관련 답변 및 평가

한줄평

- **AI데이터센터 유치**가 성장 전략? 전력·환경 부담과 지역사회 비용은 설명하지 못해

취지 및 답변

- AI 산업은 AI데이터센터 설립을 필연적으로 동반합니다. 그러나 AI데이터센터가 미칠 환경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지역 내 합의,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초대형 AI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용수·토지·송배전 인프라를 소비하는 산업시설임에도, 현재 정책은 투자 유치와 속도전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AI데이터센터 예정지 중 1GW 이상의 초대형 AI데이터센터 사업 계획을 밝힌 곳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포항시 등 4곳입니다. 이에 시도지사 후보들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구미시, 포항시 후보들 총 7명 중 연락처가 없는 후보를 제외한 3명에게도 질의했습니다. 질의는 AI데이터센터 유치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수렴, 환경·전력 영향 검토, 지역 이익공유, 전력망 부담 및 시민 비용 문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AI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해 답변한 후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은미 후보(정의당), 울산광역시 김상욱 후보(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현재는 후보직을 사퇴한 울산광역시 김종훈 후보(진보당) 등 3명이 답변했습니다.

약평

- 이번 질의 결과, 답변을 회신한 후보들은 AI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소비와 환경 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보다는, ‘사회적 검토’와 ‘주민 의견수렴’ 수준에서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후보 간 차이도 분명했습니다.
- 강은미 후보는 환경영향평가·전력계통영향평가·주민 사전고지·공사중지 및 인허가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가장 적극적인 규제·통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AI데이터센터 이익공유 조례와 지역환원형 모델 등을 제시하며 지역 착취 구조 문제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 김상욱 후보는 시민참여위원회 구성과 사회적 협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 AI데이터센터 유치를 지역 산업 육성 전략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강했습니다. 특히

“전력·환경 부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부담을 관리·조정 가능한 문제로 접근하였습니다.

- 김중훈 후보는 노동·에너지 정의·지역 이익공유 문제를 적극 언급하며 주민 동의와 사회적 검증 필요성에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실행 체계와 제도 설계는 상대적으로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 AI시민행동은 AI데이터센터를 단순한 첨단산업 인프라가 아니라, 지역의 전력망·환경·용수·토지 이용 구조를 장기적으로 바꾸는 초대형 개발사업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환기시키고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지방선거에서 AI데이터센터 정책 논의가 여전히 ‘투자 유치 경쟁’ 중심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부평가

1. 주민 의견수렴과 환경·전력 영향 검토

- 질의의 취지 : AI데이터센터는 단순한 디지털 산업시설이 아니라 막대한 전력·용수·송배전망을 소비하는 초대형 개발사업입니다. 따라서 AI데이터센터 유치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을 의무화하고, 과도한 부담이 확인될 경우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질의하였습니다.
- 강은미 후보는 환경영향평가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의무화에 찬성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 미이행 시 공사중지 명령과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갈등유발시설 등 사전고지 조례」 및 「통합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행정수단을 제시하였습니다.
- 김상욱 후보는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을 통한 의견수렴에는 동의했지만, “전력·환경 부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AI데이터센터 유치를 중단하는 것은 울산 민생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I데이터센터 유치를 기본 전제로 하되 갈등과 부담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조정하겠다는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 김중훈 후보는 주민 의견수렴과 환경·전력 영향 검토 의무화에 찬성하며, “지역사회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 동의가 부족한 사업은 중단 또는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2. 지역 불평등과 이익공유 문제

- 질의의 취지 : AI데이터센터 유치가 실제로는 수도권 대기업 중심 이익 구조를 강화하고, 지역에는 전력·용수·환경 부담만 남기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와 지역 환원 장치 필요성을 질의하였습니다.
- 강은미 후보는 “지역 자원을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개발 방식은 새로운 형태의 지역 착취”라고 규정하며 가장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AI데이터센터 이익공유 조례를 통해 기업 매출 또는 순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김상욱 후보는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지역환원 장치나 이익공유 구조에 대한 구체적 제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 김종훈 후보는 지역고용, 지역업체 참여, 주민편익시설, 지역환원 계획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부담만 집중될 경우 사업 재검토 가능성에도 동의하였습니다.

3. 전력망 부담과 시민 비용 문제

- 질의의 취지 : AI데이터센터 확대는 송전망 건설과 발전설비 확대를 수반하며, 그 비용이 결국 시민 전기요금과 지역 갈등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망 보강 비용과 계통 영향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검증 절차를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 강은미 후보는 AI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수요와 계통 영향, 비용 부담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사회적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상풍력·태양광 기반의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계와 “지산지소형 분산전력망” 구축을 제시하였습니다.
- 김상욱 후보는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한 협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전력망 보강 비용이나 시민 부담 구조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였습니다.
- 김종훈 후보는 전력망 보강 비용과 탄소배출 부담 공개에 찬성하며, 울산시·전문가·주민·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검증기구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시민 부담 증가와 지역 전력망 불안정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답변한 후보자 (3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은미 후보(정의당) 울산광역시 김상욱 후보(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 김종훈 후보(진보당)
문의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 02-747-8500)

피지컬AI와 지역 경제 관련 답변 및 평가

한줄평

- 피지컬AI 도입으로 노동권 위협, 감시위험, 지역 경제 악영향 등 우려 불식시키지 못해

취지 및 답변

- AI는 시민의 삶 중에서도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국내 공장에 도입 예정인 ‘아틀라스’는 현대차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장미빛 전망이 높은 피지컬AI은 노동자와 산업계에 양날의 칼이 될 것입니다. 특히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울산은 자동차 산업 의존도가 높아 지역 경제에 특히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울산시장 후보를 비롯해 시도지사 후보들에게 피지컬AI 도입이 야기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질의하였습니다.
- 피지컬AI와 지역 경제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김상욱 후보(더불어민주당)와 김종훈 후보(진보당)가 답변했습니다.

약평

- 전체 시도지사 중 지역관련성이 가장 큰 울산지역 김상욱 후보(더불어민주당)와 김종훈 후보(진보당)가 답변을 해 왔지만 김종훈 후보만이 피지컬AI 도입이 몰고 올 지역사회 및 전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노동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지컬AI 도입이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 양산, 노동데이터 수집과 정보인권 침해 및 일상적 감시위험,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에 대해 밀도있는 대안제시가 무엇보다 필요함에도 김상욱 후보의 경우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양성과 지역 특화된 교육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인식을 보여줍니다. 다만, 기업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노동자 시민 로봇 조합’이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할 것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안하는 것은 참신하다고 할 만합니다.

세부평가

1. 피지컬AI 도입과 노동자 보호

- 질의의 취지 : 피지컬AI로 인해 노동자의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하고 심지어 기업이 노동자의 암묵지 노동까지 학습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지컬AI 등 신기술을 도입할 때는 노조법 등에 따라 노동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습데이터를

수집할 때도 사전동의, 목적제한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피지컬AI 도입으로 인한 노동권 침해, 감시위험 등에 대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 김상욱 후보는 이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고, 김종훈 후보는 피지컬AI 도입에 따른
 고용 충격을 막기 위해 5천억 원 규모 고용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단순반복업무가 줄어들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변화에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피지컬AI와 일자리 확보

- 질의의 취지 : 피지컬AI로 기존의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불안정하고 저임금인 일자리로
 대체될 위험에 대해 지역적 대책과 관련 지역 및 지역 업종 차원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 사실상 정부 및 공공부문의 지원, 광범위한 노동자 데이터 활용 등에
 기반하여 얻어지는 기업의 이익은 사회적 공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하였습니다.
- 김상욱 후보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 취업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인재 우선 채용, AI전환 기술을 위해 연구실증 특구 마련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으로 일자리 감소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피지컬AI
 도입으로 당장 불안정하고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인간 노동자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김상욱 후보는 기업 이익의 공유와
 사회화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공동체와 노동자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기업이 직접 피지컬AI 로봇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노동자 시민 로봇 조합’이 새로운 생산 수단을 소유하게 하는 참신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김종훈 후보는 기업이 AI로 이익을 독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며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하고 이를 위해 로봇세 도입, 데이터세 부과, 정의로운 전환기금 출연 등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답변한 후보자 (2명)	울산광역시 김상욱 후보(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 김종훈 후보(진보당)
문의	민주노총 (김석 정책국장 02-2670-9112)

스마트형 CCTV 운용 관련 답변 및 평가

한줄평

- 스마트형 **CCTV**, 법률에 따른 통제 원칙 대체로 공감하나, 첨단 감시기술의 인권 영향에 대한 민감도 현격히 차이나

취지 및 답변

- 공공장소 곳곳에 범죄예방, 교통 모니터링 등을 이유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형 **CCTV**가 운영되며 주민들의 일상이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위험성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인권침해 소지가 높은 스마트도시 **CCTV**의 운영 방식에 대하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58명에게 질의했습니다.
- ➔ 스마트형 **CCTV** 운용에 답변한 후보는 서울특별시 권영국 후보(정의당), 울산광역시 김상욱 후보(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김영환 후보(국민의힘), 충청남도 김태흠 후보(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 백승재 후보(진보당), 경상북도 이철우 후보(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 조상호 후보(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홍성규 후보(진보당)등 8명입니다.

약평

- 8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8명의 서면 답변서를 바탕으로, 지능형 **CCTV**에 대한 각 후보자의 답변을 평가했습니다. 답변을 살펴본 결과 모든 후보들이 대체로 법률에 따른 통제라는 원칙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첨단 감시기술의 인권 영향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후보군, △조건부 활용론을 취한 후보군, △유보적이거나 감시기술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후보군의 3그룹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세부평가

1. 공공장소 실시간 생체인식 **CCTV**의 금지
- 질의의 취지 : 많은 지방자치단체 **CCTV**에 얼굴인식, 음성인식, 동작인식 등 지능형 인공지능 기능이 적용되면서 갈수록 스마트화하고 있으나,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생체인식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위축시키는 등 인권 위험이 높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백승재 후보(진보당), 경기도 홍성규 후보(진보당), 충청남도 김태흠 후보(국민의힘)는 첨단 감시기술의 인권 영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았습니다. 백승재 후보는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생체인식 기능은 주민들의 행동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며 법적 근거 또한 미비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홍 후보는 공공장소 실시간 생체인식 기능 도입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홍성규 후보는 "경기도를 '빅브라더'식의 감시 사회로 전락시킬 수는 없습니다."라는 강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권영국 후보(정의당), 경상북도 이철우 후보(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 조상호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조건부 활용론을 취하였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주민의 인권을 중심에 놓고 CCTV 설치와 운영을 결정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철우 후보 역시 주민 안전을 위하여 CCTV를 운영하되 주민 피해와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이었습니다. 조상호 후보는 지능형 CCTV가 범죄 예방이나 실종자 수색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때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면서 다만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실시간으로 식별·추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충청북도 김영환 후보(국민의힘), 울산광역시 김상욱 후보(더불어민주당)는 감시기술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현직 단체장인 김영환 후보는 금지할 계획이 없으며, 다만 운영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상욱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으로 판단한 국무조정실의 입장을 존중하며, 이 기준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스마트도시시스템의 민주적 통제

- **질의의 취지 : 2024. 12. 3. 계엄 전후, 전국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CCTV에 대한 무제한 조회권한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감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과정에서 아무런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지금까지 군 뿐 아니라 경찰 등 타 국가기관의 무제한 조회권한이 여전히 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 전북자치도 백승재 후보(진보당), 세종특별자치시 조상호 후보(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홍성규 후보(진보당) 후보는 첨단 감시기술의 인권 영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았습니다. 백승재 후보는 무제한 조회 권한을 즉각 폐기하고 향후 정보 제공 요청이 있을시 '지자체 개인정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별 공문 수령을 의무화하고 제공 목적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상호 후보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군부대가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세종자치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접속하여 지속적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을 감시했다는 의혹을 짚으며 '무제한적, 상시적 직접 조회 권한'을 부여하던 관행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성규 후보 또한 무제한 조회 권한을 즉각 폐기하고 명확한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개별 공문 수령을 의무화하는 한편 심의기구를 두어 정보 제공의 목적과 범위를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 권영국 후보(정의당), 경상북도 이철우 후보(국민의힘) 충청북도 김영환 후보(국민의힘)는 조건부 활용론을 취하였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더 신중하게 더 세밀한 제공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제공할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환 후보는 조회에 대해서 더 세밀한 제공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철우 후보는 경찰, 소방, 재난대응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영상정보 제공 및 시스템 연계가

법령상 근거와 공익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지만, 외부기관이 지자체 CCTV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제한 없이 상시 조회할 수 있는 것처럼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 울산광역시 김상욱 후보(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 김태흠 후보(국민의힘)는 감시기술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김상욱 후보는 향후 대립되는 견해를 상세히 살피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회권한을 판단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김태흠 후보는 군과 경찰의 경우 특수한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법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p>답변한 후보자 (8명)</p>	<p>서울특별시 권영국 후보(정의당) 울산광역시 김상욱 후보(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김영환 후보(국민의힘) 충청남도 김태흠 후보(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 백승재 후보(진보당) 경상북도 이철우 후보(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 조상호 후보(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홍성규 후보(진보당)</p>
<p>문의</p>	<p>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 02-701-7687)</p>

교육 분야 AI 도입 관련 답변 및 평가

한줄평

- 기술 만능주의 경계, '인간 중심 교육', '교사 전문성 보장' 등 시민사회의 교육 분야 AI 핵심 정책 기조에 동의

취지 및 답변

- 지역의 구체적인 교육 방향을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은 AI시대를 맞아 교육분야의 AI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후보 58명과 아울러 시도지사 후보들에게도 공통으로 질의했습니다.
- ➔ 교육 분야 AI 도입에 대해 답변한 후보는 서울특별시 정근식 후보·한만중 후보·홍제남 후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관호 후보, 대구광역시 임성무 후보, 인천광역시 임병구 후보, 대전광역시 성광진 후보, 울산광역시 조용식 후보, 세종특별자치시 강미애 후보, 경기도 임태희 후보, 충청북도 김성근 후보, 충청남도 이병도 후보, 경상북도 임종식 후보, 경상남도 오인태 후보, 권순기 후보 교육감 후보 등 15명 및 전북특별자치도 양정모 후보(국민의힘) 1명입니다.

질의 분야별 약평

- 대체로 AI를 학교현장에 도입하더라도 교사의 업무 보조 정도에 머물러야 하고 학생의 정보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리터러시 교육 실시, AI 기반 평가 반대의 입장을 보입니다. 다만, AI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교육청 자체 AI에듀테크 플랫폼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통제 체계 마련에도 소극적인 후보(경기도 임태희 후보)가 있었습니다.
- 교육 현장 AI 도입의 문제
 - 정부는 국가AI행동계획을 통해 초·중·고 전 학년에 AI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AI 핵심 인재 양성이라는 산업적 측면만 앞세운 위험한 접근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 국가의 AI 인재 양성 정책이 합의와 검증 없는 속도전이자 사교육 종속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며 공교육 혁신의 본질은 '공공성 확보와 인간 중심 교육'에 있으며, 무분별한 디지털화는 교사의 전문성을 약화시킨다는 의견을 낸 후보와 세계적 추세라는 이유로 '국가의 AI 핵심 인재 양성 정책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거나 AI 기술의 적극적 교육

도입을 최대 성과로 강조한 후보(경기도 임태희 후보)도 있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교육의 도구로서 AI를 일부 활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AI 리터러시(문해력) 교육의 내용**

- AI 리터러시(문해력) 교육은 단순한 AI 활용이나 윤리를 넘어, AI의 편향성과 인권 영향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교육입니다. 즉, AI 시대 시민의 권리와 책임 주체, 권리 침해 시 구제 방안을 중심으로 주체적 AI 리터러시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 공교육의 핵심을 '인간 중심 교육'과 공공성 확보에 두고 무분별한 기술 도입을 강하게 견제하며 특히 AI 리터러시를 단순 기술 활용이 아닌 알고리즘 편향성 비판, 책임 주체 규명, 권리 침해 시 구제 절차까지 다루자는 의견을 제시한 후보들이 있으며, 반대로 스마트기기 100% 보급과 자체 AI 플랫폼 전면 도입을 성공적인 핵심 성과로 내세우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생산적 역량 함양에 방점을 둔 후보(경기도 임태희 후보)도 있었습니다.
- 모든 후보들이 AI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지만, AI 리터러시 교육의 내용이나 범위, 교육방식에는 각자 다른 의견이 존재하였습니다.

- **AI와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보인권**

- 유럽 주요국이 디지털 기기의 활용에 대한 우려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정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였고,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를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학습 이력이 데이터화되어 상시 모니터링 및 프로파일링될 경우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와 감시 위험이 발생하며, 민간 에듀테크 기업의 데이터 남용 우려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AI 평가의 불투명성과 편향성으로 인한 공정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경계하며, 학생 데이터가 상시 모니터링되거나 민간 에듀테크 기업에 넘어가 공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될 위험을 강력히 비판하며 AI 서·논술 평가는 편향성과 불투명성이 있어 최종 평가는 인간 교사의 고유 권한이어야 함을 강조한 후보가 다수이나, 반대로 AI 중심의 교육 도입을 핵심 성과로 내세운 후보 역시 존재합니다. 특히 편향성 우려가 제기되는 AI 서·논술형 평가조차 교사와의 채점 일치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 및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후보(경기도 임태희 후보)도 있었습니다.

- **교육청 자체 AI·에듀테크 플랫폼 운용**

- 교육청이 개별 또는 공동으로 독자적 AI 플랫폼(에듀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생들의 활동이 시스템에 집적되어 정보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객관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 다수의 후보가 교육청의 자체 플랫폼 사업이 교육공동체의 합의 없는 하향식 행정이라 비판하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으며 또한 방대한 데이터 집적으로 인한 상시 감시 및 프로파일링 위험을 막기 위해 독립적 통제기구 신설을 약속하고 공공성 확보와 정보인권

보호하려는 후보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부 후보는 자체 AI 교수학습 플랫폼 '도입과 스마트기기 보급을 성공적인 교육 혁신 성과로 내세우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방대한 데이터 축적에 대해서도 공공 시스템이라는 점만 강조할 뿐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시·통제 체계 마련에는 소극적인 후보(경기도 임태희 후보)도 있었습니다.

약평

- 16개 시·도 15명의 교육감 후보자들과 1명의 시도지사 후보의 서면 답변서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AI 교육 정책 기조(인간 중심 교육, 공공성 확보, 교사 전문성 및 자율성 보장, 무분별한 디지털화 견제 등)에 비추어 각 후보자의 답변을 평가했습니다. 답변을 살펴본 결과 AI 교육 정책 기조는 △긍정 평가 및 정책 일치도가 높은 후보군, △조건부 동의 및 신중론을 취한 후보군, △유보적이거나 기조와 배치되는 후보군 등 3부분으로 크게 구분되었습니다.

1. 긍정평가 및 정책 일치도가 높은 후보군 (인간 중심, 공공성 확보, 무분별한 디지털화 견제에 강한 동의 / 10명)

이 후보군은 기술 만능주의를 강하게 경계하며, 시민사회의 요구인 '인간 중심 교육', '학생의 정보인권 보호', '교사의 전문성 보장'에 매우 부합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오인태 (경남): AI를 교육의 목적이 아닌 다변화를 위한 도구로 한정하며, 인성·감성·협업력 등 인간 고유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보인권 보호 장치 없는 AI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에 반대하며, 독립적인 상설 통제기구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AI의 기계적 학생 평가에도 명확히 반대합니다.
- 한만중 (서울): AI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서울형 AI 공공성 거버넌스' 구축과 '학생 데이터 권리헌장'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AIDT 전면 도입에 반대하며 스웨덴 등의 사례를 들어 문해력 저하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고, AI를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단독 채점 역시 금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 조용식 (울산): 딥페이크 등 부작용에 대응하는 '울산 디지털 백신' 프로젝트와 영유아 미디어 노출을 차단하는 '디지털 섯다운 가이드북'을 제시하여 무분별한 디지털화를 견제합니다. 독립적인 'AI 데이터 감시위원회' 상설화 등 정보인권 보호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 임병구 (인천): 정부의 검증 없는 속도전식 AI 정책 도입을 단호히 비판합니다. 교사가 기기 관리자로 전락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디지털 매니저' 확대를 약속했고, 데이터를 민간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천 교육 데이터 정의위원회' 설치를 공약하는 등 시민사회 기조와 매우 높은 일치도를 보입니다.
- 임성무 (대구): 기능 인력 양성 중심의 교육을 비판하며 인간성과 창의성 함양을 중시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의존에 따른 문해력 저하와 교사 역할 약화를 우려하여

AIDT 도입에 매우 부정적이며, 학생을 획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AI 서·논술형 평가에도 강하게 반대합니다.

- 성광진 (대전): '인간 존엄성 실현'과 '평등한 기회 보장'에 공교육의 본질을 두고 산업 인재 양성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신중한 연구와 접근이 우선되어야 하며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의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김성근 (충북): 인간 중심, 잠재력 발휘를 돕는 평등한 기회보장을 공교육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교과서 채택은 교사와 학교의 자율적 선택, 학생 정보인권 보호를 관리기준에 포함, 체계적 감독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AI 서·논술형 평가는 학생·교사·학부모 교육 3주체의 의견 수렴 후 단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 자체 AI 에듀테크 운용 사업은 우선 활용실태, 현장 체감도 파악,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 홍제남 (서울): 공교육의 핵심은 기술 도입이 아닌 '인간 중심 교육'과 '학생 권리 보호'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AI 의존을 경계하며, 학생 데이터 남용과 감시를 막기 위해 '최소 수집 원칙' 확립과 '서울교육 정보인권위원회'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교사의 평가권을 지키기 위해 AI 서·논술형 평가 전면 확대에 반대하고, 하향식 에듀테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장관호 (전남광주): 공교육의 본질이 인간의 존엄임을 강조하며 기술 만능주의를 명확히 경계합니다.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이 학습권과 정보인권을 침해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민간 에듀테크 기업의 데이터 접근 차단, 상설 학생정보인권 보호기구 설치, 기존 하향식 플랫폼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양정모 후보(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 중 유일하게 AI교육분야 질의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공교육이 인간중심이어야 한다는 의견과 리터러시 교육이 전제되지 않는 AI 도입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AI 리터러시 조례 제정 및 거버넌스 구축하고, 현장 실태를 파악하여 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디지털디톡스 시간을 도입하고, 지자체가 주도하여 민간 대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차단하는 등 '3중 정보체계' 구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 조건부 동의 및 신중론을 취한 후보군 (AI의 필요성 인정하되 보완책 및 교사 자율성 강조 / 4명)

이 후보군은 시대적 흐름으로서 AI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엄격한 안전장치, 교사 주도성, 정보인권 통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 임종식 (경북): '사람 중심 AI 대전환 교육'을 기조로 삼아 AI를 보조 도구로만 제한합니다. 데이터 최소 수집 및 민간업체 재활용 금지 등 정보보호 원칙을 매우 강조하며, AI 평가는 참고 도구일 뿐 최종 책임과 판단권은 반드시 교사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정근식 (서울): '적극적 활용과 책임 있는 검증의 균형'을 취합니다. '학습 데이터 주권' 공약을 신설해 정보인권을 보호하고, 서·논술형 평가는 자체 AI('채움 AI')를 보조로

활용하되 최종 주체는 교사임을 명확히 하여 기술의 편리함과 교사의 전문성을 융합하려 합니다.

- 이병도 (충남): AI 디지털교과서의 전면 도입에 신중론을 펴며, 교사의 판단 아래 보조자료로만 제한적 활용을 주장합니다. 데이터 보호와 목적 외 활용 금지를 강조하고, 예산의 타당성 재검토 및 최종 평가는 교사가 책임져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권순기 (경상남도): AI시대 대비 교육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인재 공급이 아니라 사람중심, AI는 보조도구라는 입장입니다. 학생 뿐아니라 학부모 리터러시교육 실시도 제안하고 있으며 교육청 자체 AI플랫폼 및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은 현장과 충분한 공감 없이 진행된 점에 대해 점검하고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교육정책의 현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유보적이거나 기조와 배치되는 후보군 (정부 정책 적극 동의 또는 자체 디지털화 강행 / 2명)

이 후보군은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정보인권 침해나 무분별한 디지털화 견제보다는, AI 기술의 선도적 도입과 국가 예산 투입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 임태희 (경기): AI 디지털교과서 플랫폼이 민간 업체에 독점되는 것에는 반대하나, 이미 자체 플랫폼인 '하이러닝'을 통해 80만 개 이상의 자체 콘텐츠로 적극적인 AI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후보들과 달리 자체 개발한 AI 서·논술형 평가(상관계수 0.94)에 매우 긍정적이며 이를 적극 확대 적용하려는 입장이어서, 교사의 자율성 보장이거나 기술 견제보다는 기술 주도 평가 체제로의 전환에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 강미애 (세종): AI 핵심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 정책에 적극 공감하며, AIDT가 문명 변화에 따라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학생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을 '적다'고 평가하고 예방교육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으며, 교육부의 막대한 플랫폼 예산 투입도 디지털 문화 선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적 격차 우려로 AI 서·논술형 평가에는 반대했습니다).

4. 평가

- 이들 후보들의 답변을 종합하면, 대다수 후보가 기술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인간 중심 교육'과 '교사 전문성 보장'이라는 시민사회의 핵심 정책 기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 학습권 및 교사 주도성 : 대다수가 AI(특히 AIDT)를 교육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닌 '교사를 돕는 보조 도구'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도한 기기 사용이 불러올 문해력 저하와 정서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전반적으로 깊습니다.
- 정보인권 확보 : 세종특별자치시 강미애 후보를 제외한 답변을 보내온 거의 모든 후보가 민간 에듀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 프로파일링 및 상시 감시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데이터 주권 선언, 독립된 거버넌스(통제기구) 신설, 공공 플랫폼 활성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AI 기반 평가 : 경기도 임태희 후보(적극 찬성 및 시범운영 확대)를 제외한 나머지 14명의 후보는 AI를 활용한 서·논술형 단독 평가에 강하게 반대하거나 매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AI의 편향성 문제를 우려하며, 교육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최종 책임은 오직 교사와 공교육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 입을 모았습니다.

<p>답변한 후보자 (16명)</p>	<p>서울특별시 정근식 후보 서울특별시 한만중 후보 서울특별시 홍제남 후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관호 후보 대구광역시 임성무 후보 인천광역시 임병구 후보 대전광역시 성광진 후보 울산광역시 조용식 후보 세종특별자치시 강미애 후보 경기도 임태희 후보 충청북도 김성근 후보 충청남도 이병도 후보 경상북도 임종식 후보 경상남도 오인태 후보 권순기 후보 교육감 후보 전북특별자치도 후보 양정모 후보(국민의힘)</p>
<p>문의</p>	<p>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p>

붙임자료. 후보자 답변 현황

1. 시·도지사 후보자 답변 현황 전체 - 후보자 총 54명 중 11명 답변 (공란은 무응답)

선거구명	후보자	소속정당	답변유무(5/29 오후 5시)
서울특별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특별시	유지혜	여성의당	
서울특별시	이강산	자유통일당	
서울특별시	권영국	정의당	답변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종욱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은미	정의당	답변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김광만	무소속	
부산광역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답변 불가 응답
부산광역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광역시	정이한	개혁신당	
대구광역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광역시	이수찬	개혁신당	
인천광역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답변 불가 응답
인천광역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광역시	이기봉	개혁신당	
대전광역시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광역시	강희린	개혁신당	
울산광역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답변함
울산광역시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광역시	김종훈	진보당	답변함
울산광역시	박맹우	무소속	
세종특별자치시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답변함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	하현휘	개혁신당	
경기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선거구명	후보자	소속정당	답변유무(5/29 오후 5시)
경기도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	홍성규	진보당	답변함
경기도	김현욱	국민연합	
강원특별자치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국민의힘	
충청북도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김영환	국민의힘	답변함
충청남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	김태흠	국민의힘	답변함
전북특별자치도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양정무	국민의힘	답변함
전북특별자치도	백승재	진보당	답변함
전북특별자치도	김성수	무소속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무소속	
경상북도	오종기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	이철우	국민의힘	답변함
경상남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	박완수	국민의힘	
경상남도	전희영	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	양윤녕	무소속	

※ 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명시된 선거구 순입니다.

1-1. 광역시 제외 AI데이터센터 설치 예정 지역(포항시, 구미시) 후보자 답변 현황 전체 (후보자 총 7명 중 연락처 있는 후보자 3명 중 0명 답변) (공란은 무응답)

선거구명	후보자	소속정당	답변유무(5/29 오후 5시)
포항시	박희정	더불어민주당	
	박용선	국민의힘	
	박승호	무소속	연락처 없음/발송안함
구미시	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김장호	국민의힘	연락처 없음/발송안함
	조순자	개혁신당	연락처 없음/발송안함
	임명배	무소속	연락처 없음/발송안함

2. 교육감 후보자 답변 현황 전체 - 후보자 총 58명 15명 답변 (공란은 무응답)

선거구명	후보자	답변유무(5/29 오후 5시)
서울특별시	김영배	
서울특별시	한만중	답변함
서울특별시	조전혁	
서울특별시	이학인	
서울특별시	윤호상	
서울특별시	정근식	답변함
서울특별시	홍제남	답변함
서울특별시	류수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숙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관호	답변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김대중	
부산광역시	정승윤	
부산광역시	최윤홍	
부산광역시	김석준	
대구광역시	서중현	
대구광역시	임성무	답변함
대구광역시	강은희	
인천광역시	도성훈	
인천광역시	이대형	
인천광역시	임병구	답변함
대전광역시	정상신	
대전광역시	맹수석	
대전광역시	성광진	답변함
대전광역시	오석진	
대전광역시	진동규	
울산광역시	구광렬	
울산광역시	조용식	답변함
울산광역시	김주홍	
세종특별자치시	강미애	답변함
세종특별자치시	안광식	
세종특별자치시	임전수	
세종특별자치시	원성수	
경기도	임태희	답변함
경기도	안민석	
강원특별자치도	강삼영	

선거구명	후보자	답변유무(5/29 오후 5시)
강원특별자치도	최광익	
강원특별자치도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박현숙	
충청북도	윤건영	
충청북도	김성근	답변함
충청북도	김진균	
충청남도	이병도	답변함
충청남도	이병학	
충청남도	김영춘	
충청남도	이명수	
전북특별자치도	이남호	
전북특별자치도	천호성	
경상북도	김상동	
경상북도	이용기	
경상북도	임종식	답변함
경상남도	오인태	답변함
경상남도	송영기	
경상남도	김준식	
경상남도	권순기	답변함
제주특별자치도	송문석	
제주특별자치도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 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명시된 선거구 순입니다.

[보고서] 6·3 지방선거 AI 정책 공약 답변 공개 및 평가

발행일 2026. 05. 31.

발행처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담당 사무처 (참여연대 김희순 팀장 02-723-0666)